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청년 변호사들과 함께 공수처·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말한다.

-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공수처·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의 해법을 제시한다.
- 공정성 논란으로 정치적 분열만 유발하는 ‘옥상옥’ 수사기관 공수처, 국민의 인권 침해 우려가 높은 경찰 수사권 독립 대신 ‘기소배심제 도입’ 으로 수사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2019년 8월 19일 오후 2시,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센터장 박진호)는 여의도연구원에서 청년 변호사들과 함께 세미나를 열어 최근까지도 여·야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수처법안), 검찰청법 일부법률개정안 및 형사소송법 일부법률개정안(이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해법을 발표한다. 공수처법안 및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은 장기간 국회 공전과 그에 따른 국민들의 정치·사법 불신을 야기하였으나, 정작 그 동안 공수처법안 및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의 문제점과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여의도연구원은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인 조태진 변호사(법무법인 서로, 前 대한변호사협회 이사)의 진행으로 사법연수원 출신 청년변호사 2,000여 명을 대변하는 대한법조인협회 회장 최건 변호사의 발제 및 변환봉 변호사(자유한국당 성남수정당협위원장, 前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김대광 변호사(배심제도연구회 재무이사)의 각 토론을 통해 수사권은 대통령 의 것도, 검찰·경찰의 것도 아닌 국민의 것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시될 대안인 기소배심제도는 현재 미국 수정헌법 5조에 기초하여 시행되고 있는 선진 사법제도로써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에 따른 여·야 관계자들의 줄줄이 수사와 이론적 근거도 희박한 편가르기 식 ‘사법개악’을 ‘사법개혁’이라 주장하는 조국 前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상황에서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인다.

2019. 8. 13.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